

IV. 主要 經濟 懸案

1. 公企業의 民營化

- (公企業의 位相) 전력, 가스,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이 공기업 형태로 독점화되어 있어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큰 편임
- (民營化의 意味)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에 조응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, 거시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
- (民營化計劃의 修正 背景) 1993년 민영화 계획은 주로 경제력집중 억제 방침과 주식시장의 불안정 등 때문에 지지부진함. 이에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
- (展望) 민영화와 함께 시장구조의 개선, 즉 競爭體制의 強化가 필요함

公企業의 國民經濟的 役割은 매우 큰 편임

- (公企業의 位相) 전력, 가스,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이 공기업의 형태로 독점화되어 있어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큼
 - 1996년 현재 정부투자기관 18개, 정부출자기관 9개, 기타 투자기관의 출자회사, 지방공기업 등으로 구성
 -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, 중요한 것은 주요 기간산업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공기업으로 독점화되어 있다는 점

<각국의 주요 산업별 기업 형태>

	미국	일본	독일	영국	한국
통신	사기업	공사혼합	공기업	공사혼합	공기업
전력	사기업	사기업	공사혼합	공기업	공기업
가스	사기업	사기업	사기업	사기업	공기업
철도	사기업	공사혼합	공기업	공기업	정부기업

주: 선진국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거나 현재 진행중

民營化를 통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

- (民營化의 意味)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민영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순응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, 거시적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이미 배분된 경제자원의 재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
 -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 규모에서 민영화 및 규제완

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

- 대체로 공기업의 비효율성 제거, 재정적자의 보전, 민간기업의 활동 영역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
- 현재의 WTO체제나 OECD가입 등 개방화와 관련된 조치와는 별도로나 향후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형성(CR 등)에 미리 대응한다는 면에서도 민영화 및 규제완화가 필요함

다양한 형태의 민 營化 및 規制緩和 방식의 모색

- (民營化 計劃의 修正 背景) 93년 민영화계획이 경제력집중의 우려,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公企業의 效率性を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민영화 및 規制緩和 방식을 다시 모색
 - 93년 '공기업 경영쇄신방안'에서는 신경계계획에서 천명한 대로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함.
 - 정부투자기관(국민은행 등 6개), 정부출자기관(외환은행),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(한국중공업 등 30개), 정부지분 보유기업(평화은행 등 21개)를 망라하여 총 58개를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하였음
 -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民有化, 즉 이른바 주인 찾아주기라는 소유권 변경에만 집착한 결과,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부의 기업정책과의 배치, 주식시장의 불안정성, 정부의 재정적 이해 및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계획의 극히 일부만 실현되었고, 경영혁신도 이루어지지 못함
 - 한국비료 등 16개 기업과 국민은행 등 6개 공기업만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됨
 - 經濟構造의 改革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,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 지시로 금년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임
 - 전반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의 방향에서 추진
 - 당장 민영화할 수 있는 공기업은 民營化를 통해,

그렇지 못한 공기업은 투자기관의 출자기관으로의 전환 등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經營革新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

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競爭體制의 強化 필요

- (展望) 금년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고 하나 만족스러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듯.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개선, 즉 競爭體制의 強化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처리해야 함
 - 대상 기업의 매각 추정액은 매각방식 확정이 약 4조 3,000억 원, 미확정이 약 5조 원 정도임
 - 대규모 공기업으로는 한국중공업(6,500억 원), 가스공사(7,000억 원), 한국통신(16,800억 원), 담배인삼공사(27,000억 원) 등이 있으며 기타 한국전력, 포항제철 등도 민영화 검토 대상임
 - 대규모 민영화 기업 인수를 위한 대기업간 경쟁 치열 예상
 - 민영화의 대상과 시기, 주식매각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지난 2년 여의 경험으로 볼 때 불과 2개월 남짓한 동안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움
 -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도 주식시장의 동향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시 시기는 불확정적임
 - 민영화의 實質的 內容은 시장화 및 규제철폐를 통해 생산효율과 배분효율을 증대시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임
 - 비효율성은 정부의 엄격한 간섭과 규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, 독점에 의한 것이기도 함
 - 따라서 전반적인 정부의 規制緩和를 통하여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한편, 공기업의 소유나 경영권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독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競爭體制를 強化시켜야 할 것임

(박 동 철)